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왜인 건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나의 말들은 자꾸 줄거나
또 다시 늘어나 마음속에서만
어떤 경우라도 너 알지 못하는
ⓐ 진짜 마음이 닿을 수가 있게
꼭 맞는 만큼만 말하고 싶어

브로콜리너마저,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중에서

(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노래>

(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의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부치지 않는다.

김남조, <편지>

(라) 발송된 편지가 항상 수신자에게 정확히 도착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처럼, 편지의 메시지 역시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단 편지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항상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발송된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로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적 경험, 동일한 기억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편지나 사랑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만들 것이다. 수신자가 발신자의 메시지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역방향에서도 재구성하여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은 하나의 메시지로 완벽하게 동일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텍스트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의도 혹은 다른 생각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텍스트 창조의 한 경로이다. 텍스트 T는 수신자에게 t_1, t_2, t_3, \dots 같이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고, t_n 이 다시 발신자에게 돌아갈 때는 T가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진 텍스트 t_m 이 되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메시지는 언제나 ‘대체로’ 전달될 뿐이다. 이때 우리는 대화 상대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잘 깨닫게 된다. 결국 자신만의 메시지와 텍스트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신자가 명확한 편지나 사랑시에서조차 발신자의 메시지는 대략으로만 전달되고, 수신자는 자신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 뿐이다. 연인들 간의 소통이 늘어갈수록 오해가 더 쌓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떠난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랑시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떠난 사람을 설득하여 식은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떠난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사랑시에서도 옛 연인이 사랑이 끝난 것을 아쉬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따로따로였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했을 뿐 상대방의 마음은 대략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옛 연인들은 동시에 서로를 떠났고, 동시에 버림받는 일종의 공모(共謀) 상태에 있었다. 어떤 관계이든 발송된 편지가 제 주소를 찾아가는 법은 없는 것이다.

1-1. (라)에 근거하여 ⓐ이 가능한 조건을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15점]

1-2. (라)를 바탕으로, ⓒ이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고 (나)는 어떠한 사랑시인지 쓰시오. (120자 이내) [20점]

1-3. (라)의 관점에서 ⓒ의 이유가 무엇일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흔히 검사도구의 판정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한 단순 정확률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검사도구의 판정(양성 또는 음성)이 피검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즉 피검자가 바이러스 감염 시 양성으로 판정한 경우의 수와 비감염 시 음성으로 판정한 경우의 수의 합이 전체 검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이렇게 단순 정확률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검사도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변별하는 능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한 제약 회사의 바이러스 검사도구 A와 B는 모두 실패작인데, 검사도구 A는 피검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90% 확률로 음성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검사도구 B는 피검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90% 확률로 양성이라는 판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자. 검사도구 A가 바이러스가 드문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이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매우 높게 여겨질 것이다. 대부분의 피검자가 비감염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검사도구 B가 인구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검사도구 B의 타당도 또한 매우 높게 여겨질 것이다. 피검자 대부분이 감염자이므로 검사도구의 판정과 실제 감염 여부의 일치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단순 정확률로 측정할 경우, 위의 검사도구 A와 B는 모두 좋은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두 검사도구 모두 '신호'인 바이러스와 '잡음'인 비바이러스성 물질을 변별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단순 정확률에 기반한 타당도 측정은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능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탐지이론이 개발됐다. 신호탐지이론은 신호탐지 상황을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호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와 없다고 보고한 경우를 조합하여 다음 네 가지로 나눈다. 신호가 존재하고 반응 또한 신호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를 '적중', 신호가 존재하나 반응은 신호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를 '누락', 그리고 신호가 존재하지 않고 반응은 신호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를 '오경보', 신호가 존재하지 않고 반응 또한 신호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를 '바른 기각'이라고 한다. 적중률, 누락률, 오경보율, 바른 기각률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text{적중률(누락률)} = \frac{\text{적중(누락)의 경우의 수}}{\text{신호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

$$\text{오경보율(바른 기각률)} = \frac{\text{오경보(바른 기각)의 경우의 수}}{\text{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

신호탐지이론은 신호와 잡음을 변별하는 능력을 통계적으로 표준화한 적중률에서 통계적으로 표준화한 오경보율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측정된 값은 신호와 잡음의 실제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호탐지이론에 기반하여 앞선 예를 다시 살펴보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있는지에 상관없이 검사도구 A와 B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드문 곳에서 사용된 검사도구 A는 피검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옳게 반응하지만, 피검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 틀리게 반응할 것이다. 즉 검사도구 A는 (㉠)은/는

높지만, (㉡)도 높기 때문에 신호와 잡음을 변별하는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인구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곳에서 사용된 검사도구 B는 (㉢)은/는 높지만, (㉣)도 높기 때문에 신호와 잡음을 변별하는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신호탐지이론에 따르면 두 검사도구 A와 B의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1.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밑글에서 찾아 적으시오. [20점]

2-2. <보기>를 읽고, 아래 제시된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보기>

- 어떤 경찰청은 경찰관의 업적을 점수화해서 관리한다.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할 때마다 1점을 주고, 무고한 시민을 잘못 체포할 때마다 1점을 감점한다. 경찰관 갑은 과거에 인구의 4분의 3이 범죄자인 A 지역에 근무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현장에서 체포했고, 많은 수의 범죄자를 검거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 결과 그는 승진하여 A 지역과 인구수가 같은 B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B 지역은 인구의 절반이 범죄자다. ㉤ 같은 같은 수사방식을 유지하면 B 지역에서도 높은 업적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B 지역의 인권단체는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 체포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경찰관 갑의 부임에 반대한다.
- 인화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새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려 한다. 제품 P는 매우 민감한 제품으로 모든 연기를 화재로 간주해서 경보를 울린다. 제품 Q는 제품 P와는 달리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충분히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공장장은 제품 P를 공장에 설치하기로 했다.

<개념>

적중, 누락, 오경보, 바른 기각

- (1) ㉤의 오류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 (2) <보기>의 인권단체와 공장장이 신호탐지이론에 따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합리적 선택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확률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의 선택을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이라고 부른다. 아래는 선택 상황의 전형적인 예이다.

	상태 A	상태 B
행위 X	5	2
행위 Y	1	7

각 행위는 어떤 상태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으며 각 결과의 이익의 크기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 상황에서는 각 행위의 기대이익, 즉 각 상태가 실현될 확률에 이익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 큰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의 확률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택을 ‘무지 하에서의 선택’이라고 부른다. 이런 선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이 알려져 있다. ㉠ **최소 극대화 규칙**은 각 행위가 산출할 수 있는 최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최대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위의 상황에서 행위 X의 경우 얻게 될 수 있는 최소 이익이 2이고 Y의 경우 1이므로 X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지의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택의 결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할 경우 적용하기에 바람직한 규칙이다. ㉡ **최대 후회 극소화 규칙**이라는 것도 있다. 이 규칙은 각 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후회의 정도’의 최댓값들을 비교하여 그중 최솟값을 갖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각 결과의 후회의 정도는 그 결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행위 선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으로부터 해당 결과의 이익을 뺀 값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행위 X를 선택했는데 상태 B가 실현됐다면 후회의 정도는 $7 - 2 = 5$ 로 계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각 결과의 후회의 정도를 계산했을 때 그 최댓값을 최소화하는 행위는 Y이다. 이 규칙은 선택으로 놓치게 되는 더 큰 이익의 기회가 실제 이익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불충분 이유율**이라 불리는 규칙은 어떤 상태가 실현될지 전혀 단서가 없는 무지의 상황에서는 각 상태에 동등한 확률을 부여하고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에서처럼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 롤스는 합리적 선택의 규칙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했다. 자신이 살 사회를 선택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할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합리적 선택의 규칙들은 하나같이 의사결정자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불평등 사회를, 재능이 특출한 사람은 능력주의 사회를, 외모가 빼어난 사람은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선택하려 하지 않을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로부터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마법을 가능케 하는 것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다.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떤 능력을 가질지, 어떤 외모를 가질지 등, 전반적

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살 사회를 선택한다고 가정된다. 상황을 단순화하여 사회에 5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무지의 베일 뒤에서 의사결정자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지 생각해보자.

사회 1	1	2	9	10	10
사회 2	5	4	3	6	5

위 표의 각 열은 의사결정자가 사회의 5명 중 각 한 사람이 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롤스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 극대화 규칙에 따라 사회 2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자신의 삶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두 사회를 비교했을 때 최소 수혜자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3-1. 아래의 선택 상황에서 ㉠과 ㉡을 따를 때 합리적인 선택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20점]

	상태 C	상태 D	상태 E
행위 P	5	2	10
행위 Q	11	5	1
행위 R	3	6	4

3-2. (나)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 아닌 ㉡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채택한다고 할 때 <보기>의 두 원칙 중 어떤 것이 채택될지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공리주의 정의 원칙에 따르면, 두 사회가 있다고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평균 이익이 높을수록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 평등주의 정의 원칙에 따르면, 두 사회가 있다고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이익의 격차가 작을수록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3-3. <보기>의 관점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무지의 베일 뒤에서 ㉡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봄은 어린이, 환자, 노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적 활동뿐 아니라 요리, 청소, 세탁 등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과 사회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성이 집 안에서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인식, 즉 돌봄의 제공자는 여성, 돌봄의 수행공간은 집안, 돌봄의 성격은 사랑이라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에 기초한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급 돌봄노동이 당연시됐다. 가부장제하에서 ‘모성의 숭고함’에 대한 찬사에 기초해 ‘이상적 여성상’이 만들어지고 여성의 성역할이 고정되었다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정주부화와 재생산노동의 비가시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절하가 일어났다. 여성의 가구 내 노동은 가시적인 실질 경제의 보이지 않는 기초임에도, 공짜 공기와 같은 자연자원처럼 취급된 것이다. 즉 돌봄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되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진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여성은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는 돌봄 담당자로 고착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언제나 대체 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로 쓰인다.

그러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돌봄의 수행공간이 집 밖으로도 확장되면서, 점차 돌봄 경제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돌봄노동이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돌봄으로 간주되던 단계에서,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판매되며 가족돌봄을 보완하다가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서비스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사회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방식을 나눠보면, <유형 1>은 돌봄노동과 비용 모두 가족이 책임지는 형태다. <유형 2>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는 유형이다. <유형 3>은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돌봄노동의 책임은 가족 내에 남겨둔다. <유형 4>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돌봄 이용권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돌봄노동은 시장화되어 있고, 돌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다. <유형 5>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돌봄의 사회화란 시장화, 공공화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 전략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해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돌봄의 탈가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의 돌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돌봄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는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정책으로, 돌봄의 재가족화는 돌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돌봄노동은 가정에서 이뤄지게 하는 정책으로 구현되어왔다. 그러나 ㉠ 이와 같은 돌봄사회화 정책이 여성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음에도 돌봄의 제공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게다가 세계화 시대에 돌봄노동의 문제는 일국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고소득 국가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과거 아내가 무급으로 수행하던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저소득 국가의 저임금 여성 돌봄노동자가 이러한 고소득 국가의 돌봄 결핍을 채워준다. 돌봄을 매개로 한 여성들의 연쇄적인 글로벌 이동과 돌봄노동의 새로운 국제분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기존 외국인노동자 도입

분야에 가사·육아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하겠다는 정책도 이러한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처럼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럴 경우, 저임금 외국인 여성노동자가 한국 돌봄노동 시장의 주된 인력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 한국인 여성들과 외국인 여성들 간 계층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이동은 송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송출국 여성들이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의 여성이 고소득 국가로 이주해 중산층 가정의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 고향에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을 고용하거나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전 지구적 돌봄 연쇄가 일어나는 것인데, ㉡ 정책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것은 수용국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송출국에서의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여성 간 연대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내에서도, 국민국가 내에서도, 지구적으로든, 오늘날에도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과 여성 간에 분배되고 있을 뿐이다.

4-1. <보기>의 ㉠~㉣가 윗글의 <유형 1> ~ <유형 5>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고르시오. [20점]

<보기>

-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국가가 그 대금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불함.
-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도 가사·돌봄 분야 취업자격을 허용함으로써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한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함.
- ㉣ 육아휴직 제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정부에서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함.

4-2. ㉡의 이유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4-3. ㉢과 같은 평가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많은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최근 15년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빠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 시기 국민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월화수목금금’으로 살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물겹게 애썼다. 그 결과 추수한 곡식이 떨어져 봄철 보리 수확 전까지 굶주리던 일명 ‘보릿고개’의 절대빈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의 비율이 1965년에는 열 명 중 네 명이었지만, 1970년에는 열 명 중 두 명으로, 1980년에는 한 명으로 급감했다. 이 시기 부동산은 사적 자산을 축적하기 좋은 수단이었다. 만약 1963년에 천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16년이 지난 1979년에는 얼마가 되었을까? 당시 부동산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약 18억 7천만 원, 투자 대비 무려 약 187배를 벌었을 것이다. 질병, 노화, 실직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취약하던 시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누구든 내 집이나 내 땅을 장만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 형성된 사적 자산 축적을 통한 부자 되기의 굳은 신념은 오늘날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다수 국민에게는 사적 자산을 축적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찾아온 호황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기존의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급격한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낮은 조세부담률은 가구 가처분소득*을 높여 부족한 사회보장을 보완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하면 높은 은행 금리 덕분에 사회적 위험에 그나마 대비할 수 있었다. 정부가 특별히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결국 선진국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는 복지국가를 가로막는 덩어리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의 확대보다 다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1982년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가 평균 1만 달러일 때, 회원국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평균 15.1%였다. 반면 한국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달성했던 1994년, 사회복지 지출이 2.8%에 불과했지만, 복지 확장의 요구는 적었다. 누구나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 각자도생에 대한 믿음이 매우 공고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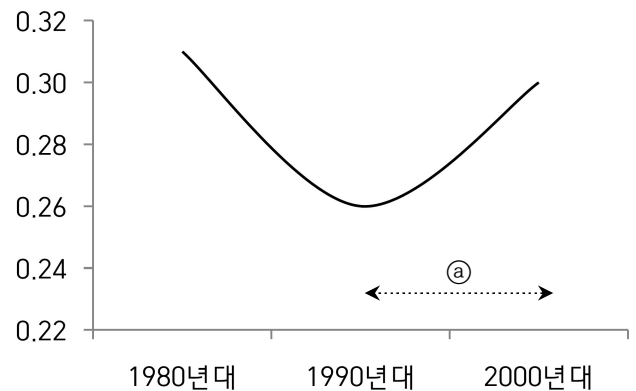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복지 체계의 취약성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생산의 자동화로 인해 숙련 노동이 대체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대량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폭증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

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복지 확대를 시도했다. 사회보험 제도를 확대했고, 취약계층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부조 제도를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시기 복지의 확대는 불평등 심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정규직 중심으로 작동되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의지할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는 매우 선별적으로 설계되어 엄격한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또한 전국민 중 단지 3%만이 엄격한 수급자격을 통과한 공공부조 수급자이다.

*가처분소득: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소득으로 실제 가구가 쓸 수 있는 소득의 규모

5-1. ㉠의 원인이 된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5-2. 아래 그림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1 사이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한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같다면(완전 평등) 이론적으로 지니계수는 0이 되고,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여 1명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있다면(완전 불평등) 지니계수는 1이 됨.

(1) 윗글에 따르면 ㉠ 시기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 윗글에 따르면 ㉠ 시기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무엇이며, 그 대응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결과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침략국에 대항하여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국의 군수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투하하려고 한다. 그런데 군수 공장 주변에는 민간인도 거주하고 있어서 폭탄을 투하하면 민간인도 함께 죽게 된다. 폭탄을 투하하면 군수 공장 파괴라는 좋은 결과를 얻지만 민간인의 죽음이라는 나쁜 결과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폭탄을 투하해도 되는가, 아니면 투하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와 더불어 나쁜 결과도 발생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중 결과 원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 행위 본성 조건: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 수단과 목적 조건: 행위가 산출하는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옳은 의도 조건: 행위의 의도는 오직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나쁜 결과는 단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이어야 한다. 만약 그 행위를 하면서 나쁜 결과를 의도하였다면 그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나쁜 결과를 그 행위의 부수 효과로 예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쁜 결과를 직접 의도해서는 안 된다.
- ㉣ 비례 조건: 행위의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보다 덜 중요해서는 안 된다. 즉 그 행위가 가져오는 좋은 결과의 이익이 나쁜 결과의 손실보다 작다면 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폭탄 투하 행위는 정당한가? 폭탄 투하는 적의 군수 공장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졌으며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폭탄 투하는 좋은 결과를 의도한 것이며, 민간인 살상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효과일 따름이다. 그리고 군수 공장 파괴를 통해 적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적의 공격으로 인한 대량 살상을 막을 수 있지만 피해가 소수의 민간인에게만 국한된다면 이는 비례 조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군수 공장에 대한 폭탄 투하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적국에 타격을 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많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적국의 도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민간인을 살상하고 주택을 비롯한 민간 시설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이 전쟁 종식이라는 좋은 목적에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민간인 살상이라는 나쁜 수단을 활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공리의 원리'는 '이중 결과 원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만을 도덕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그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대한 폭격이 민간인 살상과 민간 시설 파괴를 의도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전쟁 승리라는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러한 폭격은 정당화된다. 민간인 살상과 민간 시설 파괴가 나쁘기는 하지만 폭격으로 적국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폭격의 직접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폭격으로 발생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즉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도시 폭격은 허용되는 것이다.

6-1. ㉠~㉣ 중에서 '공리의 원리' 입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5점]

6-2. '이중 결과 원리'의 입장에서 <보기>의 ㉠, ㉡가 각각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20점]

<보기>

- 어떤 테러리스트가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을 비밀리에 설치했는데 그 폭탄은 30분 후에 폭발할 예정이다. 테러리스트의 딸은 폭탄의 비밀 위치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그 정보를 절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관은 정보를 얻기 위해 딸을 ㉠ 고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려고 한다.
- 어느 교실의 텔레비전을 켜면 전기 신호가 작동하여 이웃 마을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반의 교사는 교실에 이러한 기폭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 텔레비전을 켜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6-3. <보기>를 바탕으로 '이중 결과 원리'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생후 2개월인 아이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1주 이상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면 아이의 생명은 단축되지만 추가적인 고통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아이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며 아이의 생명 단축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환자의 추가적인 고통을 막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